

교단의 분노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와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민원 대응을 본격 시행한다. 교사 '개인'에게 악성 민원을 떠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순 민원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 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되면 학교장이 처리한다. 개별 학교가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담당한다. 특히 교원은 앞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별도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도 2학기인 9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22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고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교사의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됐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학생의 교실 분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학생을 지도할 인력이나 세부 규정이 없어 고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도 시작됐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나 규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제정됐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가 인권 침해나 생활 침해로 몰아가는 발단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교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은 셈이다.

9월 들어서는 '교권보호 4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금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들이 그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달라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 법에 명시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

고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네 탓' 공방, 정쟁으로 비화

■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영국 스카우트는 행사장에서 철수한다."

2023년 8월 4일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영국은 잼버리에 단일 국가 중 가장 많은 4천5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한 국가여서 그 충격이 더했다.

BBC 방송의 보도를 시작으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에서 순차적으로 짐을 뺐다. 영국 스카우트연맹 맷 하이드 대표는 BBC와 인터뷰를 통해 그늘 부족, 음식 미비, 위생 열악, 의료 서비스 불충분을 철수의 이유로 꼽았다. 새만금 잼버리 내부의 깊은 균열이 표면화한 순간이었다.

영국 이후 미국, 싱가포르가 차례로 잼버리 탈출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태풍 '카눈'이 새만금으로 향한다는 예보가 더해지면서 잼버리는 풍전등화를 맞았다.

결국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문화 체험 등의 일정으로 남은 기간을 보냈다. 새만금을 무대로 치러질 예정이던 케이팝 콘서트도 서울로 옮겨갔다.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시작했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맞으면서, 국제행사 유치로 한껏 높아져 있던 전북 도민의 자긍심도 한순간에 추락했다.

■ 잼버리 개영식에서 감지한 '하인리히 법칙'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은 파행 조짐의 첫 신호였다.

개영식이 열린 8월 2일 저녁, 한여름 뒤흔발은 저녁까지 이어졌고 열대야가 엄습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한 행사장은 거대한 열돔 현상으로 폭폭 찼다.

개영식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한낮부터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당초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50여 명이 영지 내 잼버리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는 100여 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6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개영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잼버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의료진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몰려든 환자로 병원이 아수라장”이라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소방당국의 개영식 중단 요청을 무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직위는 오후 10시 54분께 중단 요청을 받고도 오후 11시 20분까지 행사를 계속 이어갔다. 조직위는 “그리 중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행사 중단이 참가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 배경으로 ‘K팝’을 지목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개영식에) K팝 행사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활동하다 보니 체력을 소진해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다.

■ 폭염과 위생에 의료까지…총체적 난국

개영식을 시작으로 다수의 스카우트 대원이 폭염에 시달렸으나 조직위는 ‘스카우트 정신’을 강조하며 대회를 강행했다.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에 노출된 대원들은 잼버리를 ‘생존 체험’으로 부르며 울상을 지었다.

영지 내에는 따가운 햇볕을 가릴 나무나 그늘막이 턱없이 부족했고 수도시설도 충분하지 않았다. 햇볕을 피할 덩굴 터널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잼버리 개최 전까지 완공조차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야영장은 새만금 매립 당시부터 놓여준 용지로 지정된 곳이라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여지없이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물웅덩이가 한낮 더위에 데워지면서 야영장 전체가 한증막으로 변했다.

더위를 먹은 스카우트 대원 수십 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잼버리 병원으로 옮겨졌다. 잼버리 병원에서 처치가 어려운 환자들은 야영지 밖의 병원으로도 이송됐다.

대원들을 괴롭힌 것은 더위만이 아니었다. 무덥고 습한 날씨 탓에 벌레가 들끓었고 벌레에게 물린 대원들도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었다. 모기와 화상벌레는 ‘새만금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견인한 주범이었다.



▲ 8월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잼버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온열질환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공급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을 회수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무엇보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료 체계가 화근이었다. 병

상이 턱 없이 부족한 탓에 잼버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바닥에 ‘아전 침대’를 깔고 누워야 했다. 이마저도 없는 환자들은 맨바닥에 주저앉아 의료진의 처치만 기다렸다. 119구급차로 이송된 환자와 내원 환자가 뒤섞이면서 질서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얽친 데 덮친 격으로 약품마저 부족해 제때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 “잼버리 살리자”…팔 걷어붙인 주민·기업·지자체

새만금 잼버리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후 주민들과 기업, 지자체의 ‘새만금 살리기’가 시작됐다.

보다 못한 부안군 주민들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부안 토박이들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부안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들은 잼버리 영지에서 허리 펴 시간도 없이 쓰레기를 주웠다. 온열질환자를 병원으로 안내하는 일도 맡았다. 각종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야영지 내 1차 의료기관 성격인 허브 클리닉 내부를 소독제로 닦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4일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야영지에 쿨링버스 104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국방부는 3천715㎡ 넓이의 그늘막과 캐노피 64동을 설치했다. 대원들에게 팔토시, 쿨링마스크, 선크림, 양산 등도 제공했다. 냉장 탑차 10대, 대형 선풍기 200대, 임시 물놀이장 및 물 터널 5 곳도 새로 마련됐다.

재계도 구원투수로 나섰다. 삼성은 이온 음료 10만 개와 비타민 음료 10만 개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냈다. 포스코그룹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쿨스카프 1만 장을 잼버리 현장으로 배송했고 이마트는 생수 70만 병을 지원했다. HD현대는 120여 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을 꾸려 새만금에 파견했고 삼성 신입사원 150명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미화를 도왔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잼버리 현장으로 달려와 진료에 힘을 보탤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를 걱정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답지한 덕에 위기의 잼버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 본격화한 ‘네 탓’ 공방

태풍의 복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문화 체험을 즐겼고,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오명의 꼬리표를 달고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여론은 개최지의 안일한 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야권은 이에 맞서 예산과 권한 대부분을 지닌 중앙정부의 잘못을 부각했다.

여기에 예산 70% 삭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재검토’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새만금 신항만과 고속도로, 철도, 국제공항 등의 예산 대부분이 잘려 나갔다. 새만금 관련 예산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복성 삭감'으로 규정해 즉각 반발했고 도내 기초·광역·국회의원들은 삭발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국회 앞 등에서 예산 삭감 규탄 대회를 열고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삭감 경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수사기관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정쟁으로 인한 파열음이 요란할 무렵 정치권은 새만금 예산을 4천513억원으로 확정하면서 협치의 결과물로 추켜세웠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가량 칼질당한 예산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여전히 뜨거웠다.

예산 확정으로 날선 공방은 수그러들었으나 2024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남았다. 결과에 따라 한 차례 더 홍역을 치를 수도 있기에 전북자치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은 감사원에 관심이 쏠려 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대한민국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이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 부산은 2023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개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끌어 담은 리야드에 완패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원단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몰아 붙였다는 자체 판단을 해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발 주자인 사우디의 벽은 높았다. 실사단 방문과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이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공략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2030엑스포 유치 활동 매진…부산 도시 브랜드 세계에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 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유치 활동에 집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 개국 인사 150명 이상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외교부, 산업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매진했다.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유치전에 적극 동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구 여섯 바퀴에 해당하는 23만8천500여km를 이동하며 23개국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불발됐으나 부산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지연(Z/Yen)사가 2023년 5월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SCI)에서 부산은 세계 77개 주요 도시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부산은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세계 1천211개 여행도시 가운데 소비자 투표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뽑은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 상'에 오스트리아 빈과 함께 상위 2개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23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와 체험 장소 25곳'에 도시 순위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산을 꼽았다.

■ 재계, 새로운 시장 발굴

재계는 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국내 12대 주요 그룹은 2022년 6월 민간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총 175개국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 인사 3천여 명을 만나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 11월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며 전 발표자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개최한 회의만 총 1천645회로, 이 중 절반에는 주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급이 직접 참여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룹 CEO들이 직접 방문했거나 국내외에서 면담한 나라만 180여 개국이다. 각국 정상과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사 등 고위급 인사와의 개별 면담 횟수도 1천100회에 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사장단, 지역 총괄장·법인장 등도 총 50여 개국을 상대로 600회 이상의 미팅을 진행하며 교섭 활동을 벌였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5대 그룹이 전체 교섭 활동의 89.6%를 차지했다. 각 그룹은 BIE 182개 회원국을 비즈니스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나눠 맡아 밀착 수비했다. 삼성은 네팔과 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등을, SK는 아프가니스탄과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등을 맡았다. 현대차는 페루, 칠레, 바하마, 그리스 등을, LG는 케냐와 소말리아, 르완다 등을 각각 담당했다. 롯데는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쳤다.

■ 부산, 엑스포 불발 이후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직후 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박형준 시장은 "2030엑스포 유치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 부산에 아주 영예로운 시간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부산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박 시장은 2035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는 등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민간 우주 개발 시대 열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5월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했다.

2022년 6월 21일 성공한 2차 발사에서는 누리호에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발사체 성능 검증에 초점을 뒀다.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여러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애초 누리호 3차 발사는 5월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다. 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누리호 3단에 위성을 접속하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으로 감싸 캡슐화하는 작업 등 3단 조립을 마쳤다. 이후 누리호 3단은 1, 2단 조립체가 있는 총조립동으로 옮겨져 15일부터 일주일간 1, 2단 조립체와 3단을 기계적·전기적으로 합치는 총조립 작업과 위성 배터리 최종 충전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완성된 누리호는 22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렸고 다음날 조립동으로부터 1.8km 떨어진 발사대로